

사설

한탄강 댐의 또 다른 갈등

한탄강댐 건설 여부가 8월말엔 결판이 난다. 홍천 대평비탈도 콘도에서 마린콘 회의로 열린 '한탄강 댐 갈등 조정회의'에서 갈등조정소위원회에 댐 건설 여부 최종 결정권을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의 사회갈등 해결 본보기의 첫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세인의 관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무려 5년을 끌어왔던 문제다. 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재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만큼이라도 결론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시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때문에 이 사회의 또 하나 신선한 실험이자, 연습이라는 갈등조정 여론편자 조성되는 것 같다. 그러나 도저히 감동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갈등의 불씨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사실도 이번 갈등조정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탄강 댐으로 이해가 얹갈리는 당사자는 크게 네 부류다. 댐을 건설하려는 정부, 이를 반대하는 상류주민, 이를 찬성하는 하류주민, 환경과 등을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그들이다. 이들 4개 당사자들의 대표가 지금까지 여섯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온 끝에 우리끼리는 죽어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으니까 제3자인 조정소위에 결정권을 맡기기로 했다. 아마 상류주민, 즉 원주민들과 하류주민, 경기도 사람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

을 것이다. 절원의 반대 이유는 댐 역류에 따른 수해, 기상 변화, 그리고 서울과의 거리감 등 '계량화가 곤란한 손해'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찬성은 수물지구 보상지연, 도시계획 지연, 올 여름에도 겪은 홍수피해 거기다 친환경 댐을 활용한 관광개발 기대수요까지 겹친 당장 '계량화가 가능한 손해'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반대 주민의 논리나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갈등 조정회의장 문틈으로 흘러나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당사자 회의에서 '댐 건설 철회를 결정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수물지역으로 묶어 각종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는 엄청난 잠재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반면, 하류는 댐 건설이 안 되더라도 손해 볼 것 없다는 논리나 다를 게 없다. 바로 이 점이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라는 것이다. 상류주민의 고민은 지금도 별방의 별 불일 없는 땅 휘둘림 받는 마당에 한탄강 댐이 지척의 경기도와 삶의 질 차이를 하늘과 땅 사이로 만든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경기도민이 되고 싶다"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그 정서적 파괴, 계량할 수 없는 손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